

## 새롭게 위장된 형태로 등장한 일본군「위안부」부정론을 비판하는 일본의 연구자 · 활동가 긴급 성명

2020년 12월, 하버드대학 로스쿨 존 마크 램지어 교수가 쓴 논문 [태평양전쟁에서의 성행위 계약]이 국제적인 학술지 <국제법경제리뷰>(IRLE :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의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2021년 1월 31일, 『산케이신문』이 이 논문을 「「위안부=성노예」설의 부정」이라는 타이틀로 크게 게재한 것을 계기로, 램지어 교수와 그의 주장이 일본, 한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일거에 주목을 받게 되었다.

타이틀과 달리, 이 논문은 태평양전쟁 이전에 일본이나 조선에서 전개되고 있었던 공창(公娼)제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실질적인 인신매매였던 예창기(芸娼妓)계약에 대해서 게임이론을 단순히 적용하여, 금액이나 기간 등의 조건은, 업자와 예창기의 양자간의 생각이 합치한 결과인 것 처럼 해석하고 있다. 램지어씨는, 이 해석을 그대로 일본군「위안부」제도에 적용하였다. 전장(戰場)의 리스크를 반영해서 금액이나 기간이 바뀐 것 일 뿐,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게 조선인「위안부」와 업자간의 합의된 계약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주장과 함께, 조선내의 모집업자가 여성을 속인 것은 있지만, 일본정부나 군에게는 문제가 없었다며, 일본국가의 책임을 부정하는 주장도 전개하고 있다.

즉, 이 논문은 「위안부」를 공창과 동일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창은 인신매매된 것이 아니라, 업자와의 이해관계가 일치된 가운데 계약을 맺었으며, 「위안부」의 피해와 일본의 책임을 없었던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 논문이 전문가의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학술지에 게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아마도 일본군대사 전문가에 의한 체크를 받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선행연구가 무시된 것 만이 아니라, 많은 일본어 문헌이 참조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 취급이 자의적인 탓에, 중요한 부분에서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주장만이 전개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하 이 논문의 주요 문제점을 3가지 측면에서 지적한다.

첫째, 일본군「위안부」제도는 공창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공창제도와는 달리, 위안소는 일본군이 직접 지시, 명령하여 설치, 관리하였고, 「위안부」도 일본군이 직접, 또는 지시, 명령에 의해서 징모(徵募)하였다. 창기(娼妓)나 예기(芸妓)·작부(酌婦)였던 여성들이 「위안부」로 된 사례는, 주로 일본인의 경우는 일부 발견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은, 공창제도와는 관계없이, 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사기나 폭력, 인신매매의 형태로 「위안부」로 강제되었다는 것은, 이미 방대한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램지어씨는 일본군의 주체적인 관여를 보여주는 수많은 사료(史料)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램지어씨는, 자신의 논거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업자와 조선인「위안부」의 계약서를 1 점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근거가 부재한 주장만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료중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부분만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들어, 이 논문(6 페이지)에서 인용하고 있는 미전시정보국(米戰時情報局)의 문서(1944 년)에는, 703 인의 조선인「위안부」가, 어떠한 일을 하게될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수백엔에 의해서 유괴 또는 인신매매에 의해 미안마로 연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술이 있지만, 램지어씨는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공창제도에 대한 이해에도 큰 문제가 있다. 공창제도하에서 芸娼妓(예창기)계약은, 실제로는 인신매매이고, 폐업의 자유가 없었다는 점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와 사료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램지어씨는, 여기에서 문헌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면서, 또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창기나 매춘부, 가라유키상을 자유로운 계약의 주체처럼 논하고 있다. 예를들면 이 논문(4 페이지)에서는 [산다칸 8 번창관](『サンダカン八番娼館』)을 참조하여, 「사키 상」이 오빠에 의해서 업자에게 매매된 것에 대해서, 업자가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라든지, 그녀는 10 살이었지만 일의 내용은 이해하고 있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램지어씨는 그녀가 현장감독에게 [거짓말쟁이!]라고 항의한 것 등, 동 문서에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것은 무시하고 있다.

셋째, 이 논문은 근본적으로 여성의 인권이라는 관점이나, 여성들을 속박하고 있던 가부장제 권력의 관점들이 결여되어 있다. 여성들의 거주, 외출, 폐업의 자유, 성행위를 거부할 자유 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일본군「위안부」제도, 그리고 공창제도도 성노예제였다는 연구의 축적은 이미 많이 되어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런 연구들이 무시되고 있다. 법과 경제의 겹치는 영역을 다루는 학술지의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국내법(형법), 국제법(인도에 대한 죄, 노예조약, 헤이그육전조약(ハーグ陸戰條約), 강제노동조약, 여성·아동매춘금지조약 등)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들은 램지어씨의 이 논문에는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이 논문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일본국가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단 업자와 당사자 여성과의 양자관계만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연구자의 저술이라는 것을 넘어서, 일본의 가해책임을 부정하고 싶어서 안달하고 있는 이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위안부는 공창(公娼)이었다」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부」 「위안부는 고수입」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이런 주장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일본이나 한국 등에서 「위안부」피해 부정론자들이 반복적으로 주장해 온 언설이다. 이번 미국 저명대학의 일본전문 학자가, 동일한 주장을 영문 학술지에 발표한 것에 의해, 그 권위를 이용해서 부정론이 새롭게 포장되어 다시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논문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반일」이라며 공격하는 등, 「협한」이나 배외주의에 뿌리깊은 움직임이 일본사회에서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들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유로, 우리들은 먼저 IRLE에 대해서, 이 논문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독(査読)체제에 기반해서 재심사를 한 후, 게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일본에서 다시 확대되고 있는 부정론에 대해서, 우리들은 사실과 역사적 정의에 기반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번 부정론은, 일본, 한국, 북미 등 국경을 넘어서 전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새롭게 위장된 형태로 나타난 일본군「위안부」부정론에 대해서, 국경과 언어를 넘어서 연대하며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21년 3월 10일

Fight for Justice(일본군「위안부」문제 web 사이트 제작위원회)

역사학연구회(歴史学研究会)

역사과학협의회(歴史科学協議会)

역사교육자협의회(歴史教育者協議会)